

정부 토지개발 지원 난색 농촌공사 불참 내국인 면세점 불허

“J프로젝트, 아래선 투자 못한다”

전경련, 사업 규모 대폭 축소 검토 파문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전경련 컨소시엄(이하 전경련)이 과도한 토지개발비용을 이유로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등 세부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암·해남 일대 1천600만여m²(485만 평)의 부지를 2만5천여명이 상주하는 기업도시로 만들려던 당초 계획을 수정, 단순 관광단지로 축소개발하는 것을 물론 공사기간도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파문이 일 전망이다.

전경련은 5일, 영암·해남 일대 기업도시 예정부지를 개발하기 위해선 성토비용과 허안축조비 등을 타지역 기업도시 개발사업에는 불필요한 5

천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해 사업성이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개발계획승인을 신청하려던 당초 계획을 보류하고, 3~4개월간 세부사업 계획을 재검토·수정한 뒤 오는 10월께나 개발계획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이나 인센티브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민간 기업으로서 사업성이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도시형 기업도시를 전원형 기업도시로 바꾸는 등 비용은 최대한 줄이고, 수익성은 높이는 방

향으로 사업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경련이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찾아 사업방향을 바꾸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사업비 지원이나 인센티브 제공은 전남도의 손을 떠나있는 문제인 만큼 현재로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전경련컨소시엄은 금호건설과 대림산업, 삼환기업, 관광공사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F1경주장 부지 인근 영암지역 917만4천m², 해남지역 683만1천m²를 4조3천329억 원을 들여 인구 2만5천 명이 상주하는 기업도시로 조성할 계획이 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는 에코동과 카지노 콤플렉스(단지), 포켓아시아, 파빌리온, 해안스포츠 단지, 테마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div